

갈 수 없는 전망대 유엔사 월권?



[탐사기획 통일전망대]

◀ 김원국 옹기 ▶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라전망대는 비무장지대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죠?

▶ 차미연 옹기 ▶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려는 의미로 개성공단이 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려다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 김용국 옹기 ▶

우리 땅이지만 유엔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경기도는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사의 역할이 뭐기에 이러는 건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 리우트 ▶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약히 14도까지 내려간 마린의 언덕에는 전날 내린 눈까지 공굴 일어붙어 있습니다.

눈발에 새워진 울굴 탕트 한 통.

눈으로 하나씩 백상 하나씩 덩그러니 놓인 이 천막은 북한과 강계선을 같은 경기도 평화 부지사 참사사무실입니다.

이제까지 부지사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평화누리공원 바깥에 언덕이 왜 바깥에 언덕인지 느껴질 겁니다. 바깥이 정말 많이 듕니다.

당초 경기도가 마련한 평화부지사의 집무실 부지는 원전격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경기도는 이 다리를 건너 도라산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도 북한도 아닌 유엔사가 허락을 하지 않아 모든 계획이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때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상당면 도라산리 산 14-2’

도라 전망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유명한 안보관광지입니다.

경기도는 당초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이곳 도라 전망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개성공단 재개 발안도 찾고, 여론에 호소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기업들이 (개성공단) 떠나면서 2016년 2월에 0백억이 넘는 자산을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영장권 존폐를 앞둔데, 여기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실추고를 주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방부 협의할 거신 뒤 이곳을 관리하는 쪽은 1시간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종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선을 위한 인터넷 상까지 연결하는 등 준비를 다 마쳤지만 마지막에 반수가 생겼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허락을 해주지 않네요.

남쪽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 각각 2km 이내에 만들어진 비무장지대, 도라전망대는 이 비무장지대에 속해있습니다.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의 출입과 관리 권한은 우리 군이나 정부가 아닌 유엔사가 있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유엔사는 통화에서 “비무장지대인 도라전망대 출입은 유엔사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더라도, 승인을 불허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유엔사가 불관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행위에만 해당되며 경기도가 행정입무를 위해 출입하는 것은 승인대상일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의 고위 행정 행위가 군사 행위도 이인데, 행정 행위를 막는 것도 어찌구무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유엔사가 첨면으로 충돌하면서 유엔사의 관할권 행사가 적잖아는 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태형/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비무장지대) 허가권은 유엔사에 있지만 출입 목적은 군사적 성격을 속하는 것에 관성대야 한다고 일백하게 대가를 하고 있는데 장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영/통일부 장관]

‘같이 그대도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에서 국방장관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유엔사가 남북관계 진전에도 장애를 조성했다는 지적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 직접 남북의 일차와 조사단을 최초로 보내 현장을 점검하려 했지만,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북 타임플루 지원 계획도 화북트럭 출입문제에 대한 유엔사의 논의가 지연되자 촉박이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타임플루 수송을 포함한 대부분 출입을 결과적으로 대부분 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유엔사의 승인을 비껴갈 방법은 없을까?

문제는 67년전 체결된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법체계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유엔사 관할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유환/국가안전보장위원회 안보전략연구실장]

‘(비무장지대)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최근의 쟁점인데, 법적 안보 전략으로 건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유엔사가 DMZ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걸 알게 오르게 구제해서라야만 하고 우리 법 체계 내부에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어서 법적으로 싸우면 어기가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모순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유환/국가안전보장위원회 안보전략연구실장]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진화하는 게 어딘가 정전협정 추가의정서라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 동안의 변화된 것들, 어이어나하게 힘든 일인 하지만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승인이 들어는 겁니다.’

현재와 같이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의 관리-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15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도라 전망대로 향하는 통일교도를 삼보일배로 건너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정전협정이, 우리 법체계로는 유엔사의 승인 없이 이 버려지도록 넘어갈 방법은 없는 상황, 현재의 정전체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뿐 아니라 우리의 평화 질서에도 재약을 두고 있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환입니다.

도민 절반 이상 “개성공단 재개 필요”

1000명 대상 조사서 54%가 공감
응답자 58% “한반도 평화에 도움”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은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54%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44%에 비해 다소 높았다.

판문점선언이 있었던 2018년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73%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개성공단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는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과 화해분위기 조성 등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은 40%였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는 2018년 조사 결과(62%)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UN이나 미국 등 주변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8%가 ‘찬성’했다. ‘반대’ 입장은 39%를 차지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는 24%,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는 22%였다.

남북 교류·협력 주체가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서울 중구 등 4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를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개성잇는 콘서트 지난 18일 오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 앞에서 경기팝스앙상블의 '개성잇는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제공